

‘양식 어민 외면’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뚝’

전남어가 3년만 45%→19% 급감

보험료 상승·1년단위 소멸 부담

지원을 확대...“정부 대응 시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어민들이 해마다 줄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인 태풍·집

중호우·고수온·적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대응 사업이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에 대해 보험을 통해 추가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2008년 일부 양식어종을 대상으로 시작돼 현재 가입 품목은 전복·굴·다시마·농어·돌돔 등 23종으로,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이 알려지면서 도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45%(2,392어가)까지 올랐지만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2,057어가 38.7%, 2020년 1,391어가 26.2%까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035어가 19.4%까지 떨어졌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하는 보험료를 증가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수협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를 올려갔고 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도 덩달아 상승했다.

또 보험 보장 기간이 1년으로 매년 다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

이라는 점은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장 피해가 과거처럼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은 점도 재해보험에 대한 어민들의 관심을 낮추는 이유가 된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자 올해부터 어업인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주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보험료는 국비 50%·지방비 30%·어업인 20%로 분담했지만,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하지만 한번 외면받은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남도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닌 참조기·미꾸라지·매생이 등의 어종에 대한 가입 품목 확대와 자부담 추가 인하 등도 국비 확대를 통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험은 혹시 모를 피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인 만큼 어업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험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이 결국 예산 소모를 적게 하는 방법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시의회, 이정선 교육감 상임위 출석 요구

‘무상급식 논란’ 입장 청취

광주시의회가 방학 중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이례적으로 현직 교육감을 상임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문화위원회는 전날 308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정선 교육감 출석 건을 상정·의결하고, 20

일 3차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과 교육감은 의회 출석 시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통례로, 상임위에서 임시회 기간 중 출석을 요청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교육감의 2호 공약인 방학 중 무상급식은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름방학부터 유치원 126곳, 초·중 150개교 1~2학년 돌봄학생 1만117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소를 통한 점심 무상제공을 골자로 추진됐으나, 방학 중 급식실 운영의 어려움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우려로 결국 백지화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심의·의결기구인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임위원들의 공분을 샀고, 교육감 출석 요구라는 이례적 안전장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교육감 상임위 출석 여부를 놓고 내부논의를 진행중이다.

/길용현 기자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에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에 김정현 광산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9일 오전 ‘2022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만장

일치 선임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접수 결과, 단독으로 임후보했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께 헌신하고 광



주시민에게 봉사하는 광주시당을 만들 것”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시당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김 지사,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물가·민생안정 568억 긴급 투입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전남도는 19일 고물가 상황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에게 568억원을 투입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재정안정망 구축에 173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창업자 특례보증을 하고, 채무 상환유예 및 만기 기한을

1년씩 연장한다. 운수업계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유튜브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재정지원금 80억원을 지급한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에는 298억원을 지원한다. 농어가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67억원을 추가 확보해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한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는 9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물

가 상승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도민에게 17억원을 추가 지원해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 지원가구를 대폭 확대하고,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 사업(5억원)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김영록 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이병훈 “사실혼 딸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은 19일 “결혼한 딸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규정한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제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여성의 재산을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

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지방공무원·공직 후보자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결혼한 딸)’은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관련법에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가 모호한 점을 악용해 등록의 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의원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산 신고를 거부

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여순사건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

생자 명예 회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비해 볼 때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경제적 피



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를 포함해 유족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분들께 다음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먼저 지원해드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진단검사의학의 모든 것

- 대학병원, 병원, 의원의 검사장비 및 검사시약 문의
- 학교, 연구소, 병원, 기관, 사업장의 장비인프라 구축 및 초안 제시
- 분자진단 전문업체 Covid 19 PCR System
- 최적의 검사장비와 경제성 · 효율성

메디넷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71번길 104 (우산동)
Tel. 062) 223-3822 Fax. 062) 223-3821